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799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2월 25일 (음력 1월 19일) 월요일

혁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세대만!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을"

출발! 이명박 정부

광주문화수도·여수엑스포 차질 없게

인재 고루 등용…사회 통합에 힘쓰길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새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사회적 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광주·전남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광주문화수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최, 나주 혁신도시 및 서남권 개발사업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새 정부 인재발탁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편중인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새 대통령이 임기중 이를 반드시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관련 기사 3·7면〉

지역민들은 "나라를 잘 이끌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새정부의 순항에 대한 기원도 잊지 않았다.

경제계 인사들은 "시장 경제원리에 충실한 활력있는 성장정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광주·전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산업발전 대책을 먼저 강구한 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이 사회적 소외계층을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김영호 (51)광주 양동시장 상인회장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으며 일용노동자 박영우(42)씨는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각 시군의 핵심 공직자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면서 ▲광주문화수도 조성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공동혁신도시 건설 ▲KTX 호남선 조기개통 등 지역공약을 꼭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농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하는 등 농업을 포기하려는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농업에 대한 확실한 회생 대책이 없으면 농민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국가 자체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학생들은 "부담스럽지 않은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에는 반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며 교육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바랐다.

지역민들은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한 사회통합이 시급한 과제이며 남북이 상생·협력하는 진정한 화해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참여정부가 씨를 뿌린 국토균형발전을 이명박 정부가 물을 줘서 싹을 틔웠으면 한다"며 "지역민들도 막연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챙겨 올 것은 챙겨오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정·이종행기자 jjnews@kwangju.co.kr

민주당 공천심사 착수

'운명의 2주일'

광주 북갑 12 대 1 최고

전국 평균 2.1 대 1 기록

통합민주당이 지난 23일 공천 접수를 마감하고 24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자격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공천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2주일'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5·6면〉

민주당은 단수 후보 신청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1차 공천자를 발표하고 영남지역 등 신청자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주 중 추가 공모, 내달 9일까지 전략공천 지역을 결정하는 등 지역구 공천심사를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24일 공천 신청 마감결과, 전국 243개 선거구 가운데 171개 선거구에서 486명이 신청해 전국 평균 2.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천177명이 신청, 4.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한나라당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서울 노원을, 은평갑, 강서갑 등 64개 선거구는 1명씩만 신청했고 서울 서대문을, 서초을 등 72개 선거구에는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광주 북갑은 12명이 신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광주 남구, 광산구, 전북 전주 완산을 등에서는 11명, 광주 서을, 전북 익산갑, 전남 순천도 10명이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광주가 7개 선거구에 58명이 신청, 8.29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데 이어 전북(6.82 대 1), 전남(5.31 대 1)의 순이었다.

이는 민주당 공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남지역에 공천신청이 집중됐음을 방증해주고 있다.

48개 선거구가 몰려 있는 서울에는 119명이 신청, 2.4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울산은 신청자가 전무했고 부산(0.17 대 1), 대구(0.08 대 1), 경북(0.13 대 1), 경남(0.18 대 1) 등 영남지역의 경우 공천 신청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인천(1.50 대 1), 대전(2.00 대 1), 경기(1.69 대 1), 강원(1.38 대 1), 충북(1.13 대 1), 충남(1.10 대 1), 제주(1.67 대 1) 등도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현역 지역구 의원은 서재관(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천을 신청했으며 비례대표 27명 가운데 박영선, 서혜석 의원 등 16명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청자 명단 4면

▶ 취임식 리허설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24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국악원 정악 단원들이 풍년가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있다. 이들은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열리는 식전행사에서도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이며,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게 된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오늘 취임

오전 10시 국회서 … 새벽 0시 권한 이양 받아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제1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취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사당 앞에서 55분간의 식전행사에 이어 개식선언, 국민의례, 취임선서, 군악대 의장대 시연, 예포발사, 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명박 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시장경제에 기초한 일류국가 건설, 진보와 보수의 이념구도를 뛰어넘는 실용주의,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는 선진화 시대 건설을 새 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 근거한 신(新) 발전체제를 천명하고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로 삼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을 공식 이양받는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가회동 사저를 나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국립 현충원을 찾아 분향한 뒤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어 국민의례와 취임선서 등을 마치고 취임사를 한 뒤 연단으로 내려와 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환송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께 청와대에 입성, 취임 축하차 방한한 외국 정상들과 회동하는 것으로 17대 대통령으로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지역 주요 법안 무산 위기

서남권·F1·과기원법 17대 국회 통과 난망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낙후지역 특별법(서남권 개발 특별법), F1 특별법, 광주 과기원법 등 핵심 3대 법안이 결국 17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이 별다른 이견 없이 이뤄짐에 따라 3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없게 되면서 오는 26일 17대 국회가 사실상 마감된다.

그러나 F1 특별법, 낙후지역 특별법, 광주과기원법 등은 2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17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F1 특별법은 지난 22일 국회 문광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과의 동반 통과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남 서남권 개발의 근거가 되는 낙후지역 특별법도 한나라당 법안과의 병합처리로 아직 법사위에 머물고 있다. 또, 광주과기원법도 별다른 계기를 찾지 못하고 국회 과기정위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측은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26일 광주·전남지역 3대 핵심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3대 핵심법안의 17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우 차기 국회에서 이들 3개 법안을 재발의·상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장기화 되면서 서남권 개발 등 관련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광고 접수합니다
광주일보 광고마케팅국

우암학원 창학 55년 역사의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